

영재학교 졸업생 16% '의약계' 진학... "기초과학 지원 필요"

영재학교 졸업생 16.2%가 의약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선택과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의약계열로 이동했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재학교 졸업생은 공학계열 54.7%, 자연계열 25.1%, 의약계열 16.2%, 인문사회계열 등 4.0% 순으로 진학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공학 계열이 58.5%로 절반을 넘겼으며 자연계열 23.9%, 의약계열 13.6% 순이었다. 여학생은 공학계열 34.7%, 자연계열 31.6%, 의약계열 29.6% 등 모든 계열에서 30% 내외를 기록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90.5%는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최초로 선택한 진로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변경한 9.5%의 졸업생은 자연계열에서 의약계열로 이동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진로 변경 학생의 43.9%가 자연계열에서 의약계열로 이동했으며 공학에서 의약은 26.3%, 인문사회에서 의약은 3.5%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전공 변경 비율이 더 높았는데, 남학생은 8.0%, 여학생은 17.4%가 진로를 변경했다.

2020~2023년을 비교해보면 의약계열 진학자는 30명에서 99명으로 늘었다.



KEDI, 2020~2023년 영재학교 졸업생 분석

여학생 진로 변경 비율 높아... "정책 지원 필요"

보고서는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문 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 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가시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의약계열로 이동하는 것은 경력단절 등 젠더 문제와 엮여 있기에 실효성 있는 여성 이공계 정책이 필요

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2017년 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25년간 추적 조사하는 '한국영재교육종단연구 2017'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4차(2020년)~8차(2023년) 조사 자료를 활용해 2개년 이상 조사에 참여한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뉴스

"작업 강행이 죽음 불렀다" 노동단체, 전남도·노동부 규탄
지난 24일 영암 대불산단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숨져
사고 전 같은 작업 하던 다른 노동자 먼저 쓰러지기도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를 두고 노동·인권단체들이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라며 전남도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불산단 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 죽음의 현장 이 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관이 벗어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33분께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노동자 조영 반 탄(DUONG VAN TAN·37)이 그라인더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 숨졌다.

사고 전인 오전 8시45분께는 중국 국적의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먼저 쓰러졌으나,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체는 "전남에서는 올해 이미 공식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근본 대책이 없다. 노동안전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역시 대불산단의 위험을 방치한 공범이다. 서류상 점검과 보여주기식 캠페인에 그친 결과와 잇따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라남도의 공식 사고와 대불산단 특별대책 수립 ▲사망 원인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 구속 처벌 ▲전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과 불법 고용 전면조사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생명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 목표지침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4월10일까지 666곳 관리실태 집중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23일부터 4월10일까지 건설공사장·재난취약시설·급경사지 대상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노후 용벽 붕괴, 절개지 낙석, 건설 현장 흠막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위해 각 자치구,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광주지역 토공·골조 공사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96곳과 급경사지·용벽·절토사면·산사태 취약지역 570곳 등 66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침하 여부 ▲흠막이 등 가설구조물, 주변 축대 등 변형 여부 ▲구조물 균열·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 균열·배부름 등 변형 여부 ▲안전시설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진단 등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전광춘 기자

"3·1절 폭주족 꼼짝 마" 경찰, 광주·전남 난폭운전 특별단속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전역에서 국가기념일마다 기습을 부리는 이륜차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교통의근과 교통순찰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경력 154명과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56대를 동원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교차로와 폭주·난폭 이륜차 예상 집결지에서 음주단속을 병행한 가시적 단속 활동을 벌여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승원 기자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인천 국내·국제선 임시 취항해야"

강기정 시장 "1년 이상 하늘길 끊겨 지역민·관광업계 타격"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까지 타지역 공항 접근성 개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차 요구했다.

강 시장은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수습 등으로 인해 1년 넘게 하늘길이 단절되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하늘길이 사실상 끊겨 관광업계 매출 손실은 수천억원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

해야 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항공 편익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참사 이후의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참사 직후부터 국토교통부에 신속히 무안공항을 다시 열지 못할 경우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취항을 지난해 4월과 11월 공식 건 의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안공항을 빨리

리 재개항해야 한다 무한정 단아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국토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무안공항 재개항을 전제 조건으로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국내선과 임시 국제선 취항 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정부는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제시해 무안공항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조속히 재개항해야 한다"며 "재개항 전 까지 기간에는 지역민과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주공항~인천공항 간 국내선 취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공항 재개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상화 이전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국토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필요한 행정 지원과 협의를 즉시 시작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공항은 지난 2007년까지 국제선이 운항을 했었고 현재의 무안공항 시설과 인력을 임시로 사용한다면 6개월 이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다"며 "시도민과 관광업계가 겨울에는 광주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원철 기자

광주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계선 200m 이내)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조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학생 통학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 등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